

# 한국전기안전공사 박 철 곤사장 인터뷰...



취재 | 정책개발팀 손영선

- 前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前세종시 민간합동위원회 위원
- 前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
- 前총무처 행정조정실(행시 25회)
- 전주대학교 법학박사
-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

**Q. “전력수요 비상”, “전력대란” 등 전력수급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비상용 발전기 실태점검 실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수급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기인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난해 있었던 9·15 대정전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사태 이후 대정전의 가공할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일선 가정에서도 절전 노력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의 연속적인 고장과 유례없는 무더위 등으로 인해 전력수급예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우리 전기인이 한순간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게 된다면 지난해와 같은 사태는 언제든 재현되고 말 것입니다.

이 같은 전력수급 불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공급을 늘리는 방법과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정전 대비 훈련과 함께 공급량 확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사 역시 전력수요 위기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노력을 올해 들어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사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62,442대의 비상용 발전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정전사고 발생시 필수적인 발전기 이상 유무를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4일에는 본사와 전국 60개 사업소 2,000여명의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여름철 전기안전사고 예방과 전기절약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관의 이 같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선 현장의 사업자나 국민 일반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력수급 불안으로 인한 정전 사태는 이제 단순한 우발적 재난이 아니라 언제든지 재발 가능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Q.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소외지역 전기점검 “안전도우미” 등 전기전문기관으로서 사회참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획하고 계신 사회참여 사업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에너지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2007년도부터 전국 저소득층 주거시설 201만호를 대상으로 옥내 전기설비 고장 시 전화 한 통화로 즉각적인 무료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4시간 긴급출동 고층처리(스피드콜) 업무’를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2012년 1월부터는 그간 교통여건 상 ‘긴급출동고층처리’ 혜택을 받지 못한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 보안관 서비스’ 제도도 본격 시행해 나가고 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도서 지역에 소재한 전기공사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공사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올 상반기 중 전남 노화도와 보길도, 안좌, 자은, 암태도, 팔금도 등 6개 도서 주거용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해본 결과 주민 호응도가 매우 높아 지난 6월부터는 백령도, 울릉도, 금일도, 비금도, 도초도 등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도서를 더욱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해나갈 ‘쪽방전기설비 개선사업’도 우리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쪽방은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상 소규모 거주 공간이 밀집한 형태로 몰려 있어 위급 상황 발생시 화재의 확산이 용이하고 비상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대비해 우리 공사는 내년부터 연간 20억 원의 기금예산을 지원받아 전국 8,374개소의 쪽방시설물 중 약 2,800여 호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우선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40개 지역에 있는 8,374개소 모두가 전기안전 사각 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Q.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등으로 발전소가 가동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전력 수급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고 재발방지 및 전기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 주요시설의 정전사태는 대규모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국고 손실을 안겨다 줍니다. 물론 이 같은 사태는 대부분 전력계통 설비 안전에 대해 안이한 인식 탓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송전, 변전, 배전 설비와 같이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주요 전력계통 설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보다 엄정한 검사 기준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기존 전기사업법령만으로는 검사 기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발전소와 송·변·배전 설비 등은 사고 시 그 피해 범위가 넓고 막대한 만큼 반드시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사용전 검사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즉각 보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만 합니다. 이미 여러 해전부터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이 같은 법정검사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 주장과 규제 완화라는 논리에 밀려 이 같은 재난사태의 우려와 손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 전기안전관리 제도개선을 통해 전기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선진 안전국가로 향하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Q. 국민이 전기를 편안하고 불편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기안전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들에게 전기안전이 그 중요성에 걸 맞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전기는 이제 물과 공기처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생활자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술발전과 경제성장은 전기전력에 대한 소비 수준을 크게 높여놓았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난 수요와 그 중요도에 비해 전기 안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종 캠페인과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잇따르고 있는 전기안전 관련사고가 이를 말해줍니다. 실제 2011년도의 경우에는 전체 화재 건수 총 43,875건 중 전기로 인한 화재가 9,351건(21.3%)에 이르면서 260여명이나 되는 인명피해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감전사고로 인한 피해 건수까지 더하면 해마다 800여 명이 넘는 인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나지만 않으면 안심해도 될 일이 아닙니다. 전기안전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는 이미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를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주기적으로 더욱 철저히 하고, 전기안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만이 재난을 예방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가 꾸준히 지켜 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Q. 전기안전을 책임진 전문기관의 수장으로서는 100만 전기인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하루가 다르게 시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과제이자 대세적 흐름입니다. 인류의 기술발전을 선도해 가는 우리 전기 업종 분야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동안 해왔던 일들과 앞으로 새로이 해내야 할 일들 사이에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낡은 관행이나 경험만을 맹신하는 타성에서 벗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변화의 흐름을 읽고, 춘각을 닦는 경쟁의 파고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인으로서 나와 내 주변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기여해야겠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주문이지만 실제로 이를 행하는 경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성공과 이익은 결국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일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부터 앞장서겠습니다. 100만 전기인의 권익 증진은 물론, 전기 관련 업계의 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공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